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

국회,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의혹 대상 민주 의원들 용산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 야 4당, '쌍특검 수용 촉구' 공동행동 예고도

국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다.

국회 측은 이날 뉴스와의 통화에서 "(쌍특검법안) 막 이송됐

다"면서 "오후 4시 조금 넘어서 보냈다"고 밝혔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2년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2020년 4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특검법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4월 정의당 등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다.

대장동 특검법의 경우 당초 신속처리안건 지정했던 것에서 수정 가결됐다. 수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바꿨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특검 추천 권

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또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기존 10명인 특검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방금 쌍특검법(김건희, 대장동)이 정부로 이송됐다"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5일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스

이낙연 신당 창당·비명계 탈당 '일단 제동' 시기만 늦춰졌을 뿐 결별 수순

비명계 4인방 '퇴원 전 최후통첩 기자회견' 이낙연 늦어도 2월 중 신당 창당 완료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흥기 습격'을 당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당 지도부가 단합을 강조하면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비명계의 탈당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은 시기만 늦춰졌을 뿐 원칙과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결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혁신계를 표방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이원욱 의원은 4일 이 대표 상태가 호전되면 이 대표가 퇴원하기 전이라도 '최후통첩' 기자회견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계속 위독하면 미룰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후통첩에 대한 이 대표 반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한다며 그 뒤 당 잔류

와 탈당, 불출마, 신당 등 선택지 중에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혁신을 요구하며 내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외에 다른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김종민·윤영찬·조응천 의원은 전날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최후통첩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흥기 습격을 당하면서 이를 연기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 민주당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을 할 예정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모양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늦어도 2월 안에 창당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정만 조정했을 뿐 방향은 변화가 없다"며 "이 대표의 퇴원 여부와 상관없이 호전되면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더 나은 주민 삶 위해 기분 좋은 변화 이룰 것"

이환주 전 남원시장 국회의원 출마 선언 "더 이상 시행착오 반복할 수 없다" 밝혀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4일 남원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원·임실·순창 지역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원·임실·순창 3개 지역의 대표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자치체 3선의 경험과 노하우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역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역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세 번 연속 실패한 어려운 지역으로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바로 세우고, 지역경제를 살려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기분 좋은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환주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특별취재반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참여기업 방문 4일 김관영 도지사가 김진년 새해 첫 기업현장 방문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하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참여기업인 ㈜나리찬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시카와현민들에 조금이라도 힘 되길"

김관영 도지사, 일본 이시카와 강진 피해 위로 서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최대 규모 7.6으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 지사가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일본 이시카와현 하세 히로시 지사에게 위로서한을 최근 보냈다.

김 지사는 "하세 히로시 지사와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지진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및 건물 붕괴 등 피해상황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전라북도민 모두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썼다.

이어 "전북은 시시각각 전해지는 뉴스에 귀 기울이며 교류지역 이시카와현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전북도민의 위로와 기도가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피해가 수습돼 평온한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전북을 대표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시카와현 지진은 지난 1일 오후 4시10분에 발생했다. 현지 기상청은 한

때 노토 지방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큰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이시카와 현 와지마항에서는 1.2m 이상의 쓰나미가 확인되는 등 일본 서해 연안부에 쓰나미가 도달했다.

이번 지진으로 와지마에서 47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스즈시 23명, 나나오시 5명, 아미즈마치·노토초 각 2명, 하쿠이시·시카마치 각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경상 등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 수는 40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시카와현이 330명으로 가장 많고, 도야마현 37명, 니가타현 26명, 후쿠이현 6명, 기후현·나기노현 각 1명씩 부상자가 보고됐다. /뉴스스

'살기 좋은 내고장 완주 만들기'가 핵심

민주 정희균 예비후보, 완주서 정책보고회... 22개 공약 제시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출사표를 던진 정희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정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정 예비후보가 이날 내놓은 정책은 크게 4대 과제 총 22개 세부과제로 나뉜다.

특히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 일환으로 △수소산업고등학교 및 폴리텍대학 수소캠퍼스 설립 △스포츠클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산 6개면(고산·화산·경천·동상·운주·비봉) 산리레저관광벨트 조성(완주의 관광랜드마크) 등을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예비후보는 먼저, 주민소환 진행

절차를 완화해 모든 선출직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만 가능하며, 국회의원은 빠져있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정 예비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예비후보는 '완주서 승격'에 공을 들였다.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산업발전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정주자립권을 확보하는 등 완주를 전북특별자치도 '4대 성장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지난 8년간 해결하지 못한 '삼례C 진입출로 4차로 확충'을 약속했다.

이 밖에 △삼례읍 △용진읍 △고산 6개면(고산·화산·경천·동상·운주·비봉)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삼봉읍 등 읍면별 세부공약도 제시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특별취재반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